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미래정책연구실 *

1 개요

-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배경]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①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8% 감축, ②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 ③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강화, ④ 최근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zero)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목적] 유럽연합이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응 비용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선도자(first mover)로 신경제의 표준을 선점하여 국제경쟁력까지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음.

2 주요내용

- [탄소중립] 2019년 12월 EU 정상회의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합의(폴란드는 비동의)하여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이른바 '탄소 중립(carbon neutral)' 목표를 발표하였고, 2020년 1월 유럽의회도 이를 지지해(2019/2956(RSP) Resolution on the European Green Deal) 2020년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탄소중립'이란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만큼 신재생에너지발전·조림·탄소배출권 구입 등의 탄소 감축활동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상쇄시키는 것을 의미함.
 -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원자력 사용 허용 여부는 회원국의 자유에 맡겼지만 논의 과정에서 친반 의견이 나뉘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석탄의존도가 높은 폴란드는 자국의 탄소중립 목표를 2070년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25호, 2020.1.29.)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 작성함.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외교] EU는 기후변화가 국제적 노력이 필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외교·무역·개발협력 등을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기후 행동을 촉구해나갈 것임을 천명함.

- 유럽연합은 지구 온실가스 배출의 80%를 차지하는 G20 국가들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의 녹색 연대를 강화하고, 아프리카 외교에 있어 기후 및 환경 이슈를 외교의 중심에 둘 것임을 밝히고 있음.
- 또한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도입 가능성에 대해 중국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공정 전환] 유럽연합은 기후 중립 경제로의 전환(transition)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하고, 이러한 전환이 모두를 위한 것이며 누구도 낙오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천억 유로 규모의 공정한 전환 기금(Just Transition Fund) 조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투자은행 등으로부터 1조 유로 규모의 지원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된 바 있음.
- 유럽그린딜 정책으로 고용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 특히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 교육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분야별 정책]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유럽그린딜은 철강, 시멘트, ICT, 섬유, 화학 등을 포함하는 산업, 교통, 에너지, 농업, 건물 등의 다양한 경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분야별 목표 |

에너지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생산과 사용 분야를 탈탄소화(decarbonization)
건물	에너지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건축물(buildings)을 개조하여 에너지 사용을 절감
교통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는 수송 분야를 더 깨끗하고, 더 싸며 더 건강한 방법으로 개선

※ 자료: European Commission, "What is the European Green Deal?" (2019.12)

■ [에너지] 에너지 생산 및 사용 분야는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가 기후목표 달성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유럽은 에너지 효율과 전력 생산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에너지 법규를 2021년 6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며, 각 회원국은 2023년에 새로운 기후목표를 반영하여 각국의 에너지 및 기후계획을 갱신할 계획임.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 [건물] 건물은 에너지 소비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의 신·개축은 에너지와 모래, 자갈, 시멘트 등과 같은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자원을 절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특히, 공공지원주택(social housing), 학교, 병원 등의 개조에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에너지 약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산업] 새로운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 정책이 요구되고 있어, 유럽연합은 2020년 3월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을 위한 산업 전략을 채택할 계획이며, 철강과 시멘트 산업에 대한 정책 변화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음.

- 예를 들어,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통해 대기·수질오염의 모니터링과 에너지·자원 소비의 최적화를 이를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활동(job-intensive economic activity)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EU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sustainable products policy)을 제시하여 섬유, 건축, 전자, 플라스틱 등의 자원 집약적 분야(resource intense sectors)를 중심으로 재활용(recycle) 이전 단계에서 재료의 사용을 줄이고(reduce), 재사용(reuse)을 강화하도록 하여, 유럽 시장에 환경에 유해한 제품의 진입을 제한할 예정임.

- EU집행위원회는 유럽 내의 모든 포장(packaging)이 2030년까지 재사용 가능(reusable)하거나 재활용 가능(recyclable)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교통] 교통 분야는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점차 늘고 있어, 유럽그린딜은 2050년까지 배출량을 90%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고, 해양 분야로 배출권거래를 확장하며, 배출권거래에 있어 항공부분에 대한 무상 할당을 줄이고, 도로이용에 비용을 부과(road pricing)하는 등 교통 분야 가격체계가 환경의 영향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임.

- 2025년까지 제로 배출 및 저 배출 차량(zero- and low- emission vehicles)이 1,30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백만 개의 충전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농축산분야]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환경친화적인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른바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farm to fork strategy)’을 통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촉진할 계획임.

- EU집행위원회는 유럽회원국이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농수산업 종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의 기회를 보장하고, 살충제 등 화학제품의 사용을 줄이며, 친환경적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수입식품에 유럽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생물다양성] 2020년 3월까지 EU 집행위원회는 생물다양성 전략(Biodiversity Strategy)을 제시하고, 2020년 10월 유엔 생물다양성 총회(UN Biodiversity Conference)에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 목표를 제안할 계획이며, 손상된 산림을 복원하고 새로운 숲을 조성하기 위한 신 유럽 산림 전략(new EU Forest Strategy)도 논의되고 있음.
- [환경보호] 유럽의 시민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EU 집행위원회는 대기·수질·토양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무오염 계획(zero-pollution plan)을 마련할 예정임.

|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유럽그린딜 정책 |

수질	호수, 강,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과다한 영양염류를 줄이고, 미세플라스틱과 약품 오염을 감축
대기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에 따라 대기질 기준을 평가하고, 깨끗한 공기질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를 지원
화학	유해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대안 물질을 개발하며, 시장에 판매되는 물질의 평가에 대한 기준을 강화

※ 자료: European Commission. "Eliminating pollution" (2019.12.)

3 시사점

- 우리나라는 2020년 감축 목표 제시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바 있으나, 2030년 감축 목표 제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목표 설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2020년까지 유엔(UN)에 제출하여야 하는 2050년 감축목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임.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하에서 국제법적인 감축 의무가 없는 개도국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usiness as Usual, BAU)대비 30% 감축이라는 자발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기후변화 협상과 외교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역할의 리더십을 발휘함.
 -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이행을 위해 2015년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BAU)대비 37% 감축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나, 소극적인 정책 목표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음.
 - 파리협정(Paris Agreement)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결정문은 모든 당사국이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임.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유럽연합이 유럽그린딜의 이행 비용이 크게 들 것을 감수하면서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zero)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려는 것은 장기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신경제체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음.
 - 정부는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을 논의함에 있어 다양한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립될 경우 기존의 법정 계획¹⁾※인 등을 장기목표와 연계하여 조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회는 장기목표의 효율적인 이행을 도모하고, 관련 법정계획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입법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임.
- 유럽그린딜은 환경 규제의 강화를 예고하고 있어, 유럽에 진출하거나 무역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향후 본격화될 규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0.2.1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7~2036),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15~2024) 등임.